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 정치 기획의 모색

송태수 _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음
『한국 좌파의 재정립』
(산책자, 2008)

신자유주의와 금융세계화의 결과, 우리 사회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경제의 불안정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사회에는 “대중을 국민 혹은 시민으로 통합할 수 있는 담론적·윤리적 해계모니 세력이 없으며”, “어떤 정치세력도 대중이 납득할 만큼 합리적인 동시에 윤리적으로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진보세력의 경우 ‘고질적인 관념적인 태도’로 인해 “진보적 정치 세력이 ‘영원한 마이너리티’로 전락할 가능성을 심화시키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8월에 출간된 『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사민+복지 기획위원회 엮음; 이하 『좌파의 재정립』)의 우리사회의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다. 더

이상 새로운 정치적 기획을 늦출 수 없는 절박함에서 『좌파의 재정립』의 출간 배경을 알 수 있다. 즉, “현재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과 나아가 정신적·지적 위기 상황에 대해 성찰하면서 이러한 총체적 삶의 위기를 극복할 당당한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좌파가 성장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pp.10-11).

『좌파의 재정립』은,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향한 새로운 좌파 선언과 전략”이라는 부제에서 드러나듯이, 스웨덴식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적 기획서이다. 이러한 의도에 어울리게 네 가지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혁명주의적 사고 틀에 갇혀’ 보수-진보로 구분하는 도그마를 해체하고 ‘새로운 생산적인 보수-진보 구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둘째,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적 국가체제에 대한 진보세력의 시각을 재정립하며, 셋째,—특히, 진보세력의 윤리적 원칙을 현실에 앞세우며 계몽을 강조하는 구태의연한 태도를 극복하여—실현될 수 있는 윤리와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며, 끝으로, 시장근본주의 대 반시장주의 구도의 대립을 지양하여 도덕적 원리주의를 반대하며,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적 국가 개입을 통해 ‘시장 원칙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것이다(pp.11-12). 즉, 『좌파의 재정립』은 구태의 보수-진보 구도, 국가체제의 정통성과 관련한 인식, 그리고 시장-국가의 관계에 대한 인식 전반에서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립’을 통해서 ‘혁명의 정치가 아니라 정상 정치(normal politics)를 지향’한다는 주장이다. ‘생활 정치’라는 ‘새로운 해방공간의 기획’, 즉, “당장 오지 않을 미래에 관해 끊임없이 말하면서 정작 생활 현실에서는 무능한 진보정치”가 아니라, “현실의 변화를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생활 정치”를 지향하는 ‘재정립’된 진보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p.13).

『좌파의 재정립』은 우리 사회에서 사민주의의 현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한 1부와 그 구체적 실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2부로 나뉜다. 책의 1부는

한국 사민주의의 세계관 및 가치와 목표를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글(조원희), 사회시스템으로서 사민주의가 어떻게 인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지에 대한 글(이성재), 그간 “부당한 ‘금기와 경멸’을 받아왔던” 여운형과 조봉암에 대한 재평가(주대환),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진보담론의 다양한 흐름을 ‘구진보’와 ‘신진보’로 나누어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글(이종태), 민주노동당 분당 사태를 계기로 해서 NL과 PD라는 ‘운동권 사투리’가 퇴장하고, 이제는 ‘합법주의, 사민주의, 개량주의’를 지향해야 할 때라는 주장(홍기표), 그리고 ‘재벌의 금융자본화’ 위험에 대해 경고하는 동시에 시장을 시장주의자에게 맡길 수 없다며 시장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장하준과의 인터뷰로 구성된다.

우리 현실 속에서 복지국가의 실현 가능성을 실천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제2부는 의료(보험)제도(이상이), 국가재정 및 조세개혁 정책(정세은·이상이), 진보정치운동의 새로운 전술적 접근의 필요성(최병천)과 사회연대전략(오건호·이정무),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이종태) 등의 주제를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 경제를 끝 모를 침체의 늪으로 추락시킨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금융주도 경제시스템을 적극 모방하고자 하는 한국의 관료와 집권정당 및 지식엘리트에게 경고하는 글(장진호)은 문제의 시의성 때문에 주목을 끈다.

『좌파의 재정립』은 사민주의의 당위성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 조건 및 구체적 정치·사회운동의 역사까지 검토하면서 그 의미와 현실 가능성까지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정치현실에 대한 구체적 이해에 기반해 있다기보다 ‘지식인만의 사상으로’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좌파이념들에 대한—불세비키적 혁명주의, 반국가주의, 혹은 주체사상 모두를 포함—통렬한 비판을 읽을 수 있다. 진보세력의 ‘고질적인 관념적인 태도’의 문제에 대한 단호한 비판적 태도는 작성한 듯하다. “1980년대의 지위재(地位財)였던 마르

크스-레닌주의와 주체사상이 그 지위를 각종 포스트모던 이론들에 넘긴 지 오래지만, 진보세력 내부의 파쟁은 식민지 시대나 1980년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하다”(pp.86-87) 등과 같이 도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표현의 도발성에 개의하지 않고 읽어 내려갈 수 있는 생각거리가 계속 제공된다. ‘1980년대 마르크스주의 르네상스’의 원인은 폭압적인 독재정권에 대항해서 거의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했던 학생운동가들의 처지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적’이 광포한 만큼 386의 사상은 ‘과격’해야 했”지만, “그랬기에 386세대는 충분히 좌파적일 수 없었다.”(p.88) 『좌파의 재정립』은 비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의도된 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도발적인 표현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만큼 진보세력의 기존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접근법이나 사고관행에 대한 비판적 문제의식이 절박하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좌파의 재정립』은 그동안 한국의 진보세력이 방치해 온 주제 ‘복지국가 실현의 구체적 가능성’의 문제에도 접근하고 있다. 특히 복지국가를 위한 국가재정 및 조세 개혁 정책의 문제에 대한 접근이나 ‘사회연대전략’의 의미의 재확인 등이 그러하다. 국민의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와 동맹을 역사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복지국가 전략을 위해서 ‘성장을 통한 분배’ 전략에 대응해서 ‘선 복지 확충, 후 조세 개혁’이라는 원칙(p.200)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라던가, ‘정규직 책임론’에 위축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대중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고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기 위한 전략(p.238)으로서 ‘사회연대전략’의 의미를 재확인하는 노력은 중요한 문제의식으로 여겨진다. 그런가 하면 진보 정치운동의 공간적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영역의 탐구 시도는 소중한 실천적 경험에 근거한 주장이다. ‘진보의 무풍지대’였으며 보수 정당의 독점적 공간이었던 ‘지역’에 착목하여 진보의 공간적 거점 구축 전략을 분석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진보세력이 지역정치에서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며, 자영업자, 전업주부 및 노인층 등 1,500만 명이 거주하는 지역정치에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해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구 민주당의 공간적 거점이었던 서울 강북지역의 ‘호남 타운’이 이명박의 강북지역 ‘뉴타운’에 의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주장(p.219)은 흥미롭다.

『좌파의 재정립』은 그러나 두 가지 점에서 논쟁점을 남긴다.

첫째, 보수실용정부가 들어선 이후 그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는 있으나, 『좌파의 재정립』은 선순환 경제발전에서 재벌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p.134-135). 『좌파의 재정립』에서는 장하준의 ‘사회-재벌 타협론’의 제안도 재검토되고 있다. 즉 노동조합-시민운동-강력한 민주정부로 구성되는 ‘사회’세력들이 재벌과의 타협을 주도해서 “우리 경제의 틀을 주주-투자자 중심의 양극화와 저투자-저성장 구도에서 구출”해 내는 동시에 “한국의 산업자본을 대표하는 재벌들의 금융자본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벌을 중심으로 한 강력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집단 구조가 한국사회의 경제발전에 세운 공(p.137)이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장할 재벌의 기업집단 구조를 계속 용인해야 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특히 산업자본이 금융자본화함으로써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어간 영국경제의 문제점이 예로 제시된다.

그러나 영국경제의 침체에 대비해서 독일경제의 장기적 안정성과 성공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의 끊임없는 부침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독일경제의 버팀목은 중소기업이라 할 수 있다. 국제적 경제행위자(global player)로서 대기업은 전세계에 생산기지를 가짐과 동시에 판매시장을 겨냥한다. 그 결과 각 나라별로 상당히 유사해지고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 반면, 중소기업의 위상과 역할은 나라마다 차이가 크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기반한 세계시장 경쟁력은 독일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다. 현재 10만 개 이상의 혁신기업 중에서 종업원 수 500인 미만 중소기업이 9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이야말로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를 꾸준히 창출하는 독일경제의 중요 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97/8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창출의 측면에서 대기업의 기여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고용창출의 모터(motor)는 여전히 중소기업일 수밖에 없다. 관건적 요인은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이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한 한국 경제체제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독일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적 중견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세계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이들 중소기업 자신이 국지적 경제행위자(local player)에 머물지 않고 세계시장을 장악해가는 글로벌 행위자(global player)로 발전하고 경제의 지속 성장을 보증하는 요인이다. 국내에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건실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동구권 등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U-턴하여 독일로 다시 돌아오기도 했다. ‘잃어버린 10년’을 딛고 2002년 이후 회복되는 일본경제의 힘도 세계시장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한 우리 경제체제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대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좌파의 재정립』이 지향하는 사민주의의 핵심 내용인 총수요관리의 차원에서 이러한 격차의 극복과 지속적인 양질의 고용창출이 핵심적 과제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중소기업 중심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변화야말로 국가적 수준에서 재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좌파의 재정립』의 두 번째 문제는 사민주의의 성과의 핵심적 관건인 총수요관리 정책의 역사적 경험의 평가를 결(缺)하고 있다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사민주의의 성공 여부는 국가 수준에서 총수요관리의 성공 여부의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책에서 언급되는 1930년대 스웨덴 사민당의 정책, 소국 스웨덴의 운명을 가름할 ‘국제경쟁력 높이기’를 위해 자본 측과 우파 정치세력의 요구를 과감히 수용했던 것 역시 당시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총수요관리의 문제와 관련해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것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논쟁이 케인즈의 『화폐론』(1930년)을 거쳐서 『일반이론』(1936년)에 와서 집대성되었던 것이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사민당의 성공 여부는 결국 사민당의 총수요관리 정책이 세계화 과정에서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문제의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서구 유럽의 사민주의는 세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전까지 지속해 왔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경험한 것이 사실이다. 이른바 '제3의 길'을 중심으로 한 논쟁은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에 불과하다.

『좌파의 재정립』은 진보세력이 한국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할 것과 비현실적 유토피아에의 지향성 및 관념적 도그마에서 벗어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좌파의 재정립』은 사민주의가 '이념'이나 '주의'로 과도하게 주장되어 '다른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좌파의 재정립』의 중심적 문제의식은 사민주의라는 틀 속에서 발전시킬 수 있으나, 그 틀을 벗어나서도 다양한 복지제도의 도입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는 분명하고 차별화된 정당의 지향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진다는 점에서 사민주의의 의미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민주의는 한국사회에서의 실현 가능성의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논점들의 검토를 요하는 상태이다. 이념적 틀에 가두어두지 않은 활발한 논쟁이야말로 『좌파의 재정립』이 추구하는 바이리라.

송태수(Song, Tae-Soo) netzsong@gmail.com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한국산업노동학회 운영위원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유럽정치』(공저), 『유럽의 제노포비아』(공저), 「독일 통일 과정에서 신탁청의 역할」(Die Rolle der Treuhandanstalt im Einigungsprozess Deutschlands) 등 다수가 있다.